



# 안보전략논단

[2025년 6월호]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회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52(25-6) | 2025. 6. 2.

김정은의 망상을 깨부수자!  
문성복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지원 방안  
이성춘

생성형 AI시대의 군사안보와 군사혁신  
최규상

## 김정은의 망상을 깨부수자!

### 문 성 복

(향군 편집위원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1950년 북한의 불법 기습남침으로 개시된 6·25전쟁이 올해로 75주년을 맞는다. 당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은 김일성을 내세워 북한 내 공산정권 수립 후 전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강력한 북한군을 육성한 뒤 침략전쟁을 벌였다. 이러한 침략 시도는 집단안보를 기치로 만들어진 유엔의 강력한 대처로 패퇴되었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그 망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군사도발을 자행해 온 북한 정권은 아직도 대남 적화전략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김정은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략한 러시아의 푸틴과 동맹을 맺고 “한국 초토화, 영토 평정” 운운하며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제야말로 김정은의 헛된 망상을 깨부셔야 할 때다.

### 김정은의 세 가지 망상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망상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씨 세습지배체제의 지속 유지이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에 이런 세습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김정은의 머리 속에는 그의 딸 주애를 비롯한 그의 자식에게까지 4대 세습을 원만하게 이어가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씨 왕조가 천세 만세 이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파기이다. 1950년 김일성은 한반도 전체의 지배자가 되려는 야욕으로 무력 남침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 야망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과 우리 국군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한미동맹이 탄생했다. 김씨 정권에게 한미동맹은 철천지원수와 같다. 이후 실제 주한미군과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김일성의 재침을 강력한 힘으로 억제했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게 제2의 6·25전쟁, 즉 재침을 위한 선결 조치는 한미동맹의 파기이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 통일된 이후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끊임없이 주장한 것도,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을 파기하려는 시도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나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도 바로 한미동맹을 깨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다.

셋째, 대남무력 적화통일이다. 김정은은 선대에서 이루지 못한 대남적화의 꿈을 이뤄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 수많은 포탄과 미사일 제공에 이어 젊은 이들을 불법 파병해 피를 흘리게 만든 것도 푸틴으로부터 핵심 군사기술과 장비를 제공받고, 유사시 군사개입을 확보하려는 불순한 속내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정은은 2023년 말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 관계, 주적,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초토화, 영토 평정 운운하며 대남협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통일 관련 모든 조직과 그 이름 자체를 지우기에 나섰다 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한 것으로 오판하면 큰 착각이다. 남북대화와 교류를 통한 통일은 지워버리되 무력을 사용한 적화통일은 오히려 노골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노동당 통일전선부를 중앙위원회 10국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대남 통일전선 공작을 중단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김정은의 망상을 깨부수는 방법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망상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본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뜨게 만드는 것, 즉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정보단속으로 오랫동안 세뇌당해 왔고 진실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나 김정은이 러시아 불법 파병을 ‘쿠르스크 해방’ 운운하면서 마치 성전인 것처럼 거짓 선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과 오로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

야 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유와 인권을 억압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 등 모든 문제는 김씨 정권의 무능과 정권욕에서 기인했다는 사실도 알려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자유 통일만이 살길임을 지속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둘째, 북한 핵 무용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을 쓸모없는 무기로 만들자는 것이다. 김정은은 핵이 마치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가져봤자 결코 사용할 수도 없으며, 핵무기로 인해 오히려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즉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만드는 화근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론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두둔으로 대북 제재의 힘이 빠진 측면이 분명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의 수위를 높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을 지지하고 두둔하는 러시아와 중국 등 모든 세력에게도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

셋째, 북러 동맹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워싱턴선언에 의해 합의된 한미일체형확장억제제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군사정찰위성은 물론, 북한판 조기경보통제기, 5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핵추진잠수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는 우리 안보에 치명적 위협인 만큼 이에 상응한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협력을 제도화하고 3국 연합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유엔군사령부가 정전체제 유지는 물론, 유사시 전력 제공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 **김정은의 망상을 깨부숴야만 자유 통일이 온다!**

작년 10월 북한군의 러-우전 파병 사실을 숨겨왔던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더 이상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쿠르스크에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참에 파병을 공식화하고 북러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공표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감사하면서 희생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각종 군사기술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김정은의 남침 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치명상을 남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의 망상을 깨부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올 수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자유 통일은 최고의 안보이며, 최고의 경제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 서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지금 광복의 빛은 군사분계선 이남에만 비추어지고 있다. 이 빛이 북한 전역으로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유 통일이다. 2025년을 자유 통일 성취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향군이 앞장서자!

#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지원 방안

이 성 춘

(향군 편집·논단위원,  
동국대학교 대우교수)



##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국민이면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에 의거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청년 제대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병역의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남는 것은 예비군 통지서밖에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의 소중한 시간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무라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대하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우선 사회적으로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을 예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였던 청년 제대군인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복무기간이 국가를 위한 희생의 시간으로만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군 장병의 시간과 삶을 존중하는 기조와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시간을 전역 후 복지혜택을 통하여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에 대한 복지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지원 방안

2024년을 기준으로 육·해·공군을 포함하여 연간 전역 인원은 23만 8천여 명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청년들이 매년 자랑스러운 의무복무를 마치고 가정으로, 사회로 복귀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제2조에 의하면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제14조에 제시된 취업 지원은 중장기 제대군인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나마 2013년 법 개정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되었으나,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실제 건강한 대다수 청년들의 수혜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제대군인법은 중·장기복무자 위주이므로 의무복무 청년제대군인들의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모습보다는 병역법에 의지 피동적이며 군 복무기간을 사회와 단절된 생활로 일부 인식하거나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는 젊은 청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필자는 의무복무 완료 후 국가의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역 후 교통비 지원이다. 정부에서는 적어도 군 복무기간인 18~21개월을 기준으로 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중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한 주차비용 지원 등이다.

둘째, 청년 제대군인의 대부분은 대학 시절에 군에 지원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한 전역 후 대학 학자금 지원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의무복무 기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군 복무 이자 면제 사업’에 더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셋째,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전역 후 결혼지원금과 출산장려금 지원이다. 2024년 기준으로 남자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86세이며, 보통 결혼 연령은 20대 전역 후 30대 초반이다. 이를 기초로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이 결혼하는 30대 초반까지의 결혼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출산 장려 및 결혼 지원 정책을 지자체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괄 정책화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출산장려금 정책 대상을 살펴보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청년 결혼 지원 사항은 혼인신고 지원금, 결혼 비용, 월세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국가 정책으로 일괄 지원한다면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의 복지는 물론, 의무복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의무복무를 마친 자가 결혼 후 1년간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 시 2년간 월 1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한다면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의 국가 헌신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의무복무를 마친 자에 대한 취·창업 시 지원이다.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복무 인원 취·창업 시 지원 기간을 대학 생활 및 기타 시간을 고려한 전역 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무복무 청년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경제적 성장 기회를 국가가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의무복무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위헌이라고 함으로써 군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무복무 관련 연금 크레딧, 청약 가점 등의 사회적 보상제도는 아직도 기초적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더 진보된 대책을 마련하여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할 때이다.

## 맺는 말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의 특별한 헌신에는 이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을 국가의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전역 후 젊은 청년 제대군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6월은 특별히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차기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의무라는 이유로 청년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그만큼의 보상과 기회를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우대 정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으면 한다.

# 생성형 AI시대의 군사안보와 군사혁신

최 규 상

(향군 논단위원,  
초록소프트 AI사업팀장/이사)



## 들어가는 말

2022년 연말에 등장한 ChatGPT는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꺾었던 것 이상의 큰 충격을 주었다. AI의 상황은 ChatGPT가 등장하기 이전과 ChatGPT가 등장한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는 바둑을 둘 줄 아는 바둑인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것과는 달리, ChatGPT는 누구라도 쉽게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AI 기술이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군사혁신 추진

ChatGPT의 등장과 함께 대중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이나 초거대 AI, 생성형 AI라는 표현이 자주 언급된다. 또한 최근에는 LLM이나 SLLM(small LLM), MLLM(Multi Modal LLM),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증강생성) 등의 용어도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Kakaotok이나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 프로필을 ChatGPT가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의 사진으로 바꾸어 놓은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이처럼 ChatGPT의 등장으로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왔으며, ChatGPT의 등장 이후로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마치 3차 산업혁명 이후 인터넷이 우리의 삶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생활수단이 된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이후 AI는 인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국가안보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당 과학기술을 적용한 군사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을 촉진하고, 신무기체계의 등장은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생성형 AI의 발달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달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예견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생성형 AI의 가장 큰 특징은 보고 읽고 쓰고 판단할 수 있는 Multi Modal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마치 인간처럼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생성형 AI는 인간의 조작적 개입 없이 홀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이보그의 탄생을 예견하게 한다. 만일 사이보그와 같은 독립적 행위가 가능한 개체가 탄생하게 된다면 인류의 전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며, 전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더불어 On Device AI 기법은 Cloud나 외부 통신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말기 자체에서 고도의 AI 연산이 가능하게 하며 통신이 제한되거나, 해킹 위험이 큰 전장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On Device AI가 내장된 객체는 인간의 명령 없이도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형 AI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즉, 생성형 AI를 On Device AI 형태로 개발하고 이를 유형의 객체에 내장하게 된다면, Drone·첨단로봇·무인 무기체계 등이 전장 상황과 적의 기도를 파악 및 판단함으로써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투임무수행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며, 이러한 기법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전력지원 체계 전반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한다면 지휘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AI 참모나 서로 연결된 AI 객체들이 상호 협업하는 AI 합동작전 체계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 AI 합동작전 체계의 출현은 미래전의 핵심 체계로서 전통적 군사력의 개념을 탈피하여 지능화된 전력으로 고위험 하에서 인간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작전 반응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전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시대에 우리 군이 추구해야 할 국가안보와 군사혁신을 위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 맺는 말

생성형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변화로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군사 전략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중심축이자 전력 운용 방식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은 ChatGPT나 Gemini, RAG 등의 기반 기술에 있어서 미국, 중국 등 단위 국가 경제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국가들에 비해 열세에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LLM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막대한 재정적 지출이 필요한 한국형 LLM 개발보다는 생성형 AI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활용한 EAI(Embedded AI) 모델을 개발하고, 독립적 사고와 행동이 가능한 무인 무기체계(EAI Arms)나 무인전력 지원체계(EAI Force Support System)를 개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다. 이것이 우리 군이 생성형 AI시대의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군사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